

여전히 '천수답' 한반도 ... 민심은 댐을 원한다

가뭄이 끝나니 이제는 수해 소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2,90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61명의 인명 피해를 보았고, 4,200억원의 복구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자연 재해는 가뭄과 홍수이다. 특히, 올해는 가뭄 피해가 컸다. 86개 시·군, 9만 5,000세대가 제한 또는 운반 급수로 불편을 겪었고, 농작물 피해로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과학의 세기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기후제를 지내는 천수답(天水畝) 경제에 살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추가적인 댐 건설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구상하였던 28개의 댐 건설 계획은 좌초되거나 담보 상태에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06년부터 물 부족 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쟁만 무성한 실정이다.

이에 건설저널은 지난 달 말 여론 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의뢰하여 '댐 건설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pm 4.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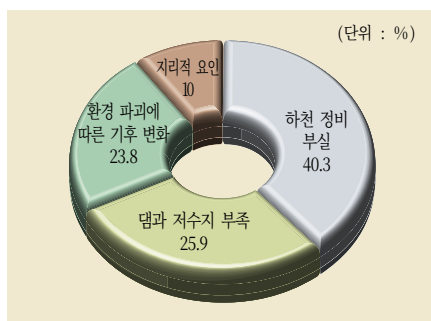
-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 68%가 댐 건설에 찬성, 비용 부담 반대는 16%에 불과 -

'가뭄과 홍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3%는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25.9%는 '댐과 저수지의 부족'을, 23.8%는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라고 응답했다. 즉, 전체의 66.2%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부의 적절치 못한 수자원 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자원 정책 '낙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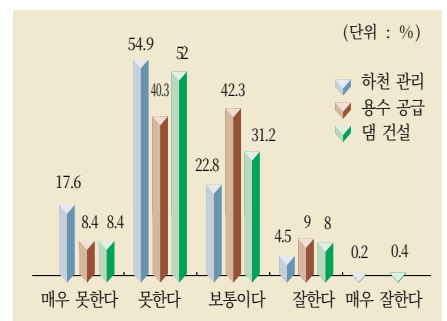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강이나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17.6%가 매우 못한다고 하였고, 54.9%는 못하

는 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72.5%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방 관리 및 준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이러한 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수 및 농·공업 용수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84%가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의 원인



매우 못한다, 40.3%는 못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48.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절반 가까이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그동안 광역 상수도망 구축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수자원 관련 정책 평가



체 급수 지역의 48%는 자연 하천에서 취수함으로써 지난 가뭄에서처럼 불안정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질 또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댐 건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 (매우 못했다 8.4%, 못했다 52.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긍정적인 평가 (잘한다 8.0%, 매우 잘한다 0.4%)를 압도하였다.

68%가 댐 건설에 찬성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추가로 12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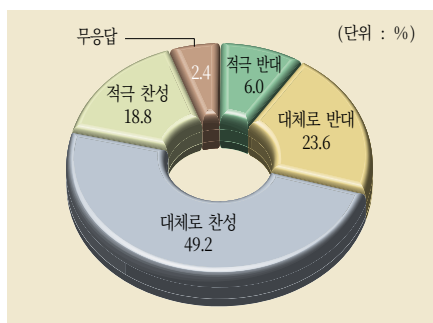
설문 결과 68.0%에 달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대체로 찬성’, 그리고 18.8%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댐 건설 반대 의견은 전체의 29.6%로 ‘대체로 반대’가 23.6%, ‘적극 반대’는 6.0%였다.

한편, 댐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져, 20대 56.0%인 데 비해 30대는 71.4%, 40대는 70.2%, 그리고 50대 이상은 8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지역 주민의 70.7%가 댐 건설에 찬성하였으며, 중소 도시는 65.7%, 읍·면 지역 주민은 61.9%가 찬성함으로써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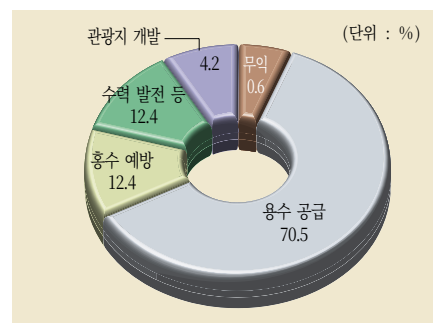
그러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40.7%는 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20~30%를 보이는 다른 지역보다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댐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건설됨으로써 겪는 강원도 지역 주민 불편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댐 건설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70.5%의 응답자들이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고 대답했다. 이 외에 홍수 예방과 수력 발전 등에 의한 경제 발전이

댐 건설로 인한 기대 이득



각각 12.4%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통상 댐의 기능으로 거론되는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수력 발전 중에서 용수 공급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홍수 조절과 발전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역시 친환경 댐 원해

‘댐을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역사 속의 가뭄과 홍수

홍성길 (주)휴머노피아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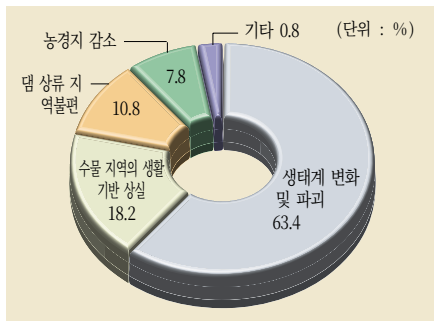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봄철(4~6월)의 가뭄(한발)과 여름(6~9월) 장마기의 홍수, 늦여름에서 초가을(8~10월)에 가뭄 나타나는 태풍, 그리고 기타의 지진, 해일 등의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 재해도 크게 보면 홍수를 일으키는 재해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재해는 가뭄과 홍수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농업 분야 재해 발생 기록에 의하면 가뭄 피해가 홍수 피해 횟수의 약 2배가 넘었다.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가뭄은 매우 심각한 자연 재해였을 것이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 쓴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는 조선 초기 정종(1400) 이후 450년 간 서울을 중심으로 176회의 홍수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태종 때(1404), 영조 때(1758년, 7월과 9월)에 있었다. 그리고 순조 때에는 15년부터 24년까지 10년 간 거의 매년 홍수가 있었다. 특히 순조 17년(1817) 6월부터 여러 달 비가 내려 남쪽 3도에 홍수 피해가 커서 호남 지방에서는 민가 2,500호, 사망 84명, 영남에서는 민가 2,000여호, 사망 48명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과 평안도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헌종 5년(1839), 철종 5년(1854)과 고종 22년(1885)에도 큰 홍수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뭄에 대한 기록은 홍수 피해만큼 기록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대한발이 28회나 기록되어 있다. 선조 12년(1579)과 17년(1584), 광해군 때(1612) 등이 대표적이다.

「삼국사기」 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해는 41번이다. 신라 진평왕 11년에는 관서(關西)의 큰비로 가옥 3만 360호가 물에 잠겼고, 물에 휩쓸려 죽은 사람이 200여 명에 달했다고 했다. 가뭄 기록은 무려 109번이나 나타난다. 가뭄이나 홍수 끝에는 기근이 뒤를 이었으며, 심지어는 자식을 팔거나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증보문헌비고」 상위고(象緯考)에는 고려 시대의 가뭄 80회·수해 52회를 기록하고 있다.

댐 건설시 우려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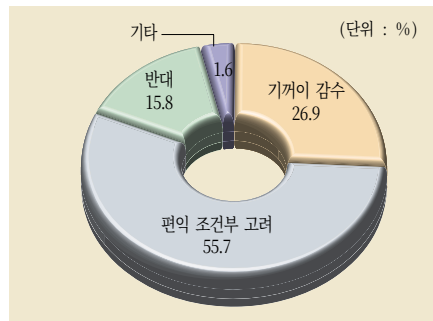
에 대해서는 63.4%의 응답자들이 자연 생태계의 변화 및 파괴를 가장 우려하였다. 그 밖에 18.2%의 응답자는 수물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 상실을, 10.8%는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그리고 6.8%는 농경지 감소를 들었다. 이는 댐 건설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불편 감수·비용 부담 반대 16%에 불과

‘댐 건설로 인한 불편함 또는 비용 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6.9%의 응답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55.7%는 편익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댐 건설에 찬성하지만, 비용과 편익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환경 친화적 댐 건설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 소요 비용 부담 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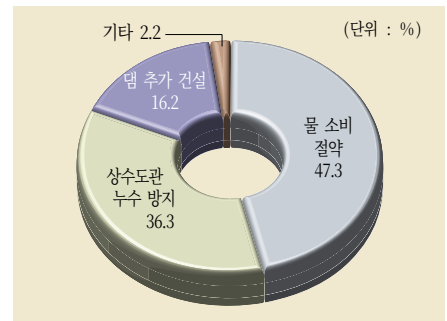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15.8%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댐 건설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과 편익의 적절한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편, 비용 부담 용의는 연령에 따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20대는 68.8%가 편익이 있다면 비용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지나지 않아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 계층에서는 39.2%가 편익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51.3%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30대와 40대는 중간적 입장을 보였다.

물 절약 및 효율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마지막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향후 물 부족 사태 방지 대책



질문에 대해서 47.3%가 국민들이 물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6.3%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등 관리 측면의 강화를, 16.2%는 댐의 추가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선행된 이후에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용을 들여 우선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추가적인 댐 건설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추가적인 댐 건설을 통한 공급 능력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효율화시킬 사항이 있으면 이를 먼저 실천할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댐을 건설할 경우에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번 설문 조사에 나타났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